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2월 2일 금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13면	[동정] 권혁열(원주) 도의장·심오섭 도의회 사회문화위 부...	1
강원도민일보	02면	도의원 의정활동비 150만원→200만원 인상 확정	2
江原日報	04면	도의원 의정활동비 50만원 인상	2
G1방송	온라인	도의회 의정활동비 연간 600만 원 인상 확정	3
강원도민일보	11면	춘천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잇달아 기지개	4
江原日報	22면	박용택 이·통장연합회 철원군지회장 취임	5
강원도민일보	17면	화천군 행정동우회 정기총회	5
강원도민일보	19면	[의정칼럼] 세계인이 극찬한 청소년동계올림픽 성지 강원	6
江原日報	온라인	강릉 전국 최고 무장애 관광도시 '입증'	7
강원도민일보	13면	[동정] 박호균(강릉) 도의원	8
강원도민일보	12면	[동정] 원제용(원주) 도의원	8
강원도민일보	15면	[동정] 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위 부위원장	8
강원도민일보	11면	[동정]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위위원장	8
강원도민일보	15면	[동정] 홍성기(홍천) 도의원	8
강원도민일보	13면	강릉시민 솔선수범 강원2024 흥행 잡았다	9
강원도민일보	07면	'평창 근로자 추락사'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도내 첫 적용	9
江原日報	17면	‘원주 만두축제’ 첫해부터 ... 소비자가 뽑은 ‘최고의 브랜드...	10
江原日報	16면	홍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직접 선발	10
강원도민일보	02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내 적용 현실성 놓고 갑론을박	11
江原日報	06면	강원대 의대 지역인재 2배 늘린다	11
江原日報	19면	설 명절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 팡팡	12
江原日報	20면	'삼척역 KTX 도입' 필요성 입증 주력	12
강원도민일보	16면	영월 상동읍 텃스텐 광산 재개발 '속도'	13
江原日報	22면	'백마고지~연천역' 전철화 추진	13
강원도민일보	11면	춘천시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도전장	14
강원도민일보	14면	주말 태백 스포츠 행사·겨울축제로 '들썩'	14
江原日報	19면	인제군 ‘캠핑’·‘물’ 만난 여름축제 기획	15

江原日報	19면	러시아산 인제 황태 美 수출길 막혔다	1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강원 산업 전망 어둡지만은 않다	16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도 감사위 부패 감시 책무 크다	17
江原日報	25면	[사설] 노후 인프라 개선 재투자는 ‘보편적 복지’다	18
江原日報	25면	[사설] 재건축·재개발, 도시계획 큰 틀에서 시행돼야	19

강원도민일보

2024 02 02 ()

13



권혁열(왼쪽)도의장·
심오섭 도의회 사회문
화위 부위원장은 3일
오후 5시 강릉시 세인
트컨벤션웨딩에서 열
리는 사천초등학교 총
동문회장 이·취임식
및 개교 100주년 기념
선포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2 02 ()

02

도의원 의정활동비 150만원→200만원 인상 확정

속보=강원특별자치도 의원 의정활동비가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된다. 이같은 인상액은 법이 정한 최대 인상폭이다.

의정활동비 인상을 골자로 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도의회 운영위원회(14일)와 본회의(23일)에서 최종 통과되면 인상된 의정활동비는 3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건설)는 1일 강원도 제2청사 글로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50만원 인상은 법령이 정한 최대 인상폭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월 2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은 지난 2003년 이후 처음 이뤄졌다.

의정활동비 인상으로 강원도의원 연봉은 지난해 5517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월정수당 3717만원)에서 올해 최대 6180만원으로 12%(663만원) 오른다. 의정활동비 인상분과 지난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1.7%)을 반영한 월정수당을 합한 금액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4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를 50만원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같은달 23일 주민공청회(본지 1월 24일자 2면)를 열어 주민 여론을 수렴했다.

주민공청회에선 사상 최대 세수 결손으로 의정활동비 인상은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과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른 의원 전문성 향상 등에 대한 찬성 의견이 엇갈렸다.

김덕형 duckbro@kado.net

江原日報

2024 02 02 ()

04

도의원 의정활동비 50만원 인상

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150만원→200만원’ 결정

강원특별자치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현재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일 강릉 글로벌본부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지급기준액 ‘50만원 인상’을 결정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개정 공포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광역의원 의정활동비 한도액은

월 200만원으로 상향할 수 있게 됐다. 심의위는 지난달 개최한 주민공청회와 100여건의 이메일을 통해 1차 회의에서 잠정 결정한 의정활동비에 대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었다.

도의회는 오는 14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다.

이어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인상된 의정활동비는 다음 달 20일 지급될 예정이며 1~2월 인상분은 소급 지급한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2024 02 01 ()

G1방송

도의회 의정 활동비 연간 600만 원 인상 확정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앵커]

강원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인상됐습니다.

월 50만 원, 연간 600만 원이 올라 연봉으로 따지면 6천만 원이 넘게 됩니다.

18개 시군의회도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이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강원자치도의회 도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안이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비를 50만 원, 연간 600만 원 인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주민공청회를 거친 의정비심의위는 강원자치도의원 의정비가 전국 최하위권인 점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연봉으로 보면 5,517만 원에서 6,180만 원으로 오릅니다.

◀전화 I N T▶

"지금 전국에서 뒤에서 두 번째였기 때문에..더 나은 정보라든지 이런 걸 주민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고.."

도내 18곳의 시·군의회도 일제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135만 원, 양양군의회는 150만 원으로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춘천과 삼척시의회, 인제군의회는 150만 원으로 인상안을 마련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13곳 대부분도 최대 폭의 인상을 추진 중인데,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달 초에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방의회의 잇따른 의정활동비 인상에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않습니다.

정부와 모든 지자체가 재정 압박 속에 예산을 줄이는 상황에 의정비만 올리는 게 타당하냐는 겁니다.

[인터뷰]

"어떤 항목에 어떻게 쓰겠다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50만 원을 올린다는 것은 도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부분이다."

반면 처우를 개선해 주고 제대로 된 집행부 견제를 기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분분한 상황.

◀클로징▶

"인상된 의정비 수준에 걸맞는, 청렴한 의정활동이 강원자치도의회 과제로 남게됐습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2 02 ()

11



소양강댐노인복지관은 1일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발대식을 열었다.

춘천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잇달아 기지개

춘천지역 곳곳에서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잇달아 추진된다.

소양강댐노인복지관(관장 허미숙)은 1일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권주상 시의회 부의장과 양숙희·박찬홍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을 열고 참여자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 사업에는 소양호가꿈이사업단 등 3개의 공익형 사업 참여자 313명과 신복읍·북산면·사북면 등 소양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서비스형 이웃돌봄사업단 참여자 100명 등 총 413명이 참여한다. 사업 참여자들은 이날 국제스케이트장의 춘천 유치를 지원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재단법인 춘천지혜의 숲(이사장 신용준)도 이날 순복음춘천교회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사회서비스형 지원사업으로 파견되는 어르신 600명은 국민연금공단, 춘천세무서 등 180곳에서 오는 12월까지 10개월간(월 60시간) 근무한다. 김진형

江原日報

2024 02 02 ()

22



◇제21·22대 (사)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 철원군지회장 이·취임식이 1일 철원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박용택 신임회장이 취임하고 최춘석 전임회장이 이임했다.

박용택 이·통장연합회 철원군지회장 취임

국제스케이트장 응원 병행

【철원】박용택 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 철원군지회장이 1일 본격 취임했다.

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 철원군지회는 1일 철원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22대 박용택 회장이 취임하고 제21대 최춘석 회장이 이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종 군수, 한기호 국회의원, 박기준 군의장, 김정수·엄기호 도의

원, 지역 이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제22대 회장으로 취임한 박용택 회장은 청양2리 이장, 빙그레 낙우회 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박 회장은 지역 이장들과 합심하고 소통하는 한편 철원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박 회장을 비롯한 군지회 임원진과 참석자들은 철원군의 현안 사업인 국제스케이트장 철원 유치를 응원했다. 김대호기자 mantough@

강원도민일보

2024 02 02 ()

17



화천군 행정동우회 정기총회 2024년 화천군 행정동우회(회장 장세국)는 1일 군문화예술회관에서 최문순 화천군수와 노이업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군의원, 행정동우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2 02 ()

19

세계인이 극찬한 청소년동계올림픽 성지 강원

의정칼럼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최초 아시아 동계청소년올림픽, 최초 국제종합대회 디지털 성화, 최초 올림픽 메타버스 출시, 역대 최대 인원 참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청소년올림픽,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재사용’ 등 전세계 언론들은 이번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대한 칭찬을 타이틀로 하여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역사상 가장 디지털화된 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는 극찬도 있었다. 필자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서 감격스럽고 자랑스롭다.

이번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과정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한체육회로부터 2019년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국내 유치 희망도시의 항제출안을 제안받았고, 2020년 1월 10일 제135차 IOC총회에서 IOC위원들의 투표결과, 대회 유치 성공이라는 결실을 얻었다.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최초의 국제규모 행사인 이번 청소년올림픽(유스올림픽·Youth Olympic)은 국제올림픽 위원회(IOC)가 청소년(만 14~18세)을 스포츠 활동의 길로 이끌어 건강한 신체와 도전 정신을 키우고자 창설

한 대회로, 경기 이외에도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와 교육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여기는 청소년대상 국제종합대회이다.

준비과정 및 경기운영 모두 우수했지만,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가장 우수한 성과는 드림프로그래밍 것이다. 동계스포츠를 접하기 쉽지 않은 전세계 청소년들에게 동계스포츠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2004년 평창에서 시작해 2023년까지 97개국 2528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다. 목적은 13~23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계스포츠 체험이 쉽지 않은 국가의 청소년이나 해당 종목에서 우수한 잠재력이 있는 청소년을 강원 평창으로 초청, 동계스포츠 훈련 및 문화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동계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선수를 육성하는 데 있다. 내용은 동계스포츠 지도 및 훈련방법 교류, 청소년올림픽 선수 육성, 한류 문화 전파 및 교류, 강원특별자치도 주요 관광지 투어 등으로 구성된다.

이렇듯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는 경제부문과 사회부문에서도 여러 효과를 유도할 것이며, 개최국에 대한 투자와 관람객들의 광범위한 경제활동으로 경제·사회적 효과의 발생이 기대된다.

경제적 측면으로는 관광객의 소비지출과 스포츠 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지출로 해당 산업에서의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효과

등을 발생시킬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성공적인 국제대회 운영을 통해 외적으로는 국가 이미지 상승이 또, 내적으로는 국민들의 대통합 효과가 기대된다. 덧붙여, 해외시장에서는 대한민국 기업의 인지도가 향상되고, 대한민국과 강원특별자치도의 교통, 문화, 사회기반시설 등 사회기초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다양한 파생효과도 기대된다.

우리는 이미 2002한일월드컵 유치로 고용 43만 명, 부가가치 6조 3257억 원이라는 효과를 경험했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는 폐막식 이후에 이뤄지겠지만 700억 가량의 대회예산 대비 대내외적 성과는 분명 그 이상이 될 것이다.

대회 기간 중 폭설, 한파, 감염병 예방 등의 대회운영에 대한 염려가 다수의 언론에 거론되었으나, 결과는 대한민국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슬기롭게 극복했다는 것이다. 여러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하고 극복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든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모든 관계자의 노고에 큰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번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을 통해 우리 국민과 도민은 전세계의 문화·경제·스포츠를 이끄는 리더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2024 02 02 ()

江原日報

강릉 전국 최고 무장애 관광도시 '입증'

1일 무장애관광센터 개소식 열려 관광편의 개선
열린관광지 전국 최다 7개소, 올림픽시설도 호평

강릉 강릉시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에 무장애 관광도시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아이스아레나를 비롯해 강원2024 경기가 열린 강릉지역 빙상 경기장은 '배리어 프리' 경기장으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관광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조성돼 국내 및 해외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앞서 시는 2019년 1월 '강릉시 무장애 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운영해 2022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한국관광공사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더욱이 1일에는 포남동 동부보건지소에서 강릉 무장애관광센터 개소식을 갖고 종합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KTX강릉역에서 무장애 관광센터와 관광안내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무장애관광센터는 관광약자들의 여행 활성화를 위한 관광 상품·여행 안내 및 보조기기 대여 등 관광서비스 제공, 무장애 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운영하게 된다.

강희문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은 "무장애 관광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제1호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관광약자 모두를 위한 명품 관광도시, 나아가 아시아의 힐링관광수도 완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릉 무장애관광센터 개소식이 1일 강릉동부보건지소에서 강희문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심오섭 도의회사회문화위원회부위원장, 윤희주 시의회운영위원장, 심상복 강릉시문화관광해양국장, 주성희 관광복지안전센터장, 정은송 문화체육관광부 주무관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최영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2 02 ()

13



박호균(강릉) 도의원
은 2일 오후 2시
강릉시제

2청사 환동해관 신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24해양수산시책보
고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2 02 ()

12



원제용(원주) 도의원
은 2일 오후 6시
30분 원주

시 빌라드아모르에서
열리는 소망주기봉사
회 정기총회 및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2 02 ()

15



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위 부위
원장은 2

일 오후 1시 30분 인제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새해 농업인 실
용 교육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2 02 ()

11



정재웅 도의회 사회
문화위원회
장은 2일 오후 2시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춘천시 관광
광인 결의대회에 참석
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2 02 ()

15



홍성기(홍천) 도의원
은 2일 오전 10시
홍천군 화

촌농협 2층 대회의실
에서 열리는 화촌농협
제63기 정기총회에 참
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2 02 ()

13

강릉시민 솔선수범 강원2024 흥행 잡았다

GANGWON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20명 교통안내·통역 자원봉사
선수촌 킬목도리 기념선물 전달
스마일 캠페인 등 성공개최 전인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강릉시민들이 올림픽 흥행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릉시민들은 2018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살려 봉사, 응원 등 2024강원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일 강릉시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강릉시민 220여명이 2024강원대회 자원봉사자로 투입돼 안내, 통역 등 다양한 봉사를 펼쳤다.

특히 추운 날씨 탓에 교통 안내 야외 봉사자들의 이탈이 생기자 강릉시 자율방범대가 긴급 투입돼 올림픽 기간 내내 경기장 인근 교통안내를 도

왔다. 김선정 시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추운 날씨 속에 많은 봉사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한 마음으로 힘을 보탰기 때문에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2018 동계올림픽 최대 유산인 올림픽시민운동스마일 캠페인을 시작한 스마일강릉(이사장 김준래) 회원들은 지난 달 14일부터 KTX강릉역에서 올림픽 방문객 환영 및 환송 캠페인을 벌였다.

이와 함께 지역 봉사단체인 ‘사단

법인 K정나눔’은 지난 15일부터 선수촌인 강릉원주대를 방문해 지역 봉사자들이 손수 뜨개질로 만든 킬목도리를 기념 선물로 전달했다.

동계스포츠를 사랑하는 모임인 강릉동사모(회장 윤영식) 회원들은 올림픽 기간 동안 경기장 부근에서 경기장 및 관광지 안내 등 봉사활동을 펼치며 올림픽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탰다. 뿐만 아니라 강릉 시민들은 올림픽 기간 동안 지역 내 경기장을 가 득메워 선수들을 응원하기도 했다.

이연제 dusdn2566@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 02 02 ()

07

‘평창 근로자 추락사’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도내 첫 적용

태양광 건설공사 현장서 사망

민노총 “안전조치 없어 죽음 반복”

중기 관계자 “현실적 준비 미완”

평창의 태양광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강원지역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지정된 가운데 이를 놓고 노사계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오전 9시 30분쯤 평창의 한 태양광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근로자는 추락의 지붕에서 태양광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밧줄이 파손돼 약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번 사망 사고의 경우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도내 첫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다. 해당 사고에 대해 강원지청은 시공 과정에서 위험성 평가 및 이에 따른 안전조치가 적정했는지에 대해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김홍섭 강원지청장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미흡과 안전의식 결여가 중대재해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고에 대해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없이 반복되는 죽음의 현장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1일 성명문을 통해 “부산에서 전국 첫 사례가 나오지 30분 만에 발생한 사고로, 민주노총 강원본부 노동자들은 참담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며 “노동자의 생명이 하루에도 몇 번씩 사라져가는 현장에서 법은 도대체 어디 있나”고 전했다. 이어 김남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은 “노동자들이 정부와 사업주들의 무책임과 무관심 속에서 죽어가는 현실을 바꾸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1일 국회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도 식구 같은 근로자의 목숨이 누구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안전 관련 준비가 완전하지 않아 법유예가 절실히 필요하였는데 불발된 것은 모두에게 고통으로 돌아올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이번 사고에 대해 근로감독관을 급파하고,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정우진·신재훈·황선우

‘원주 만두축제’ 첫해부터 … 소비자가 뽑은 ‘최고의 브랜드’

지역음식문화 부문 ‘대상’
글로벌 축제로 육성 시동

지난해 처음 열린 ‘원주만두축제’가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지역음식문화축제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 축제에 성장하기 위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원주시는 1일 서울에서 열린 ‘2024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2023 원주만두축제로 지역음식문화축제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비자선



◇원주 만두축제가 1일 서울에서 열린 ‘2024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음식문화축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 리서치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부문별 최고의 브랜드를 발굴·시상한다.

시는 원주 대표음식 중 하나인 ‘만두’를 소재로 지난해

10월 이를 일정으로 전국 최초로 만두축제를 개최했다.

축제 기간 만두 주제관을 비롯한 만두 판매장, 공연 무대, 체험장 등이 운영됐고, 만두 빨리먹기대회와 명인 쿠

킹쇼, 만두 만들기 등 이색적인 체험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특히 전통시장이 밀집된 문화의 거리에서 축제를 열면서 100억원가량의 지역 경제 유발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올해 축제 장소를 중앙동 전통시장 및 강원 감영 일원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태훈 부시장은 “원주만두축제를 지역 대표 미식 관광 글로벌 축제로 육성해 전통시장 상인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주=허남윤기자

홍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직접 선발

【홍천】홍천군이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자 규모를 1,200여명으로 확대하고 직접 선발에 나섰다.

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2년 545명, 2023년 926명에 이어 올해는 1,2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역 농가에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유진수 농정과장을 단장으로 지난해 29일부터 3일까지 근로자 채용이 이뤄지는 필리핀 산후안시·로사리오시·산호세시를 방문해 우수 근로자들을 직접 선발하고 있다.

필리핀 3개 도시 면접 참여 프로그램 관리·감독 강화
올해 농가 1,200여명 투입
체류기간 연장 효과 기대

군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근로자 이탈률을 자랑한다. 실제 군의 경우 2022년 근로자 545명 중 단 1명의 이탈자도 없었으며, 지난해에는 926명 가운데 전체의 0.2%에 불과한 2명만 이탈했다. 더욱이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3개



◇홍천군이 지난해 29일부터 3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필리핀 3개 도시를 방문, 우수인력 확보에 나섰다.

월 연장이 확정되면서 일손 부족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군은 올해도 프로그램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선다. 우선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브로커 개입을 사전에 차단했으

며 현지 면접에서는 건강 상태, 범죄 이력 등을 확인해 우수 근로자를 확보할 예정이다. 근로자 입국 이후에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및 의료복지 제공과 함께 근로여건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사후 관리에도 힘을 기울인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우수한 계절근로자 인력을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 선발에서부터 관리까지 꼼꼼히 챙기고 농가의 소득 향상 및 노동력 결핍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위윤기자

2024 02 02 ()

02

강원도민일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내 적용 현실성 놓고 갑론을박

집중
진단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원주 구곡(141만㎡·8895가구)과 단관(100만㎡·6145가구), 강릉 교동 2지구(114만㎡·7428가구)와 춘천 퇴계·후평·석사 일대(3만5063가구), 원주 단계(5424가구)를 추가로 적용했다. 총 5곳, 6만2955가구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이어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총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용적률을 법정상한의 150%까지 상향하

강릉·춘천·원주 5개 구역 대상
“개발 쉽지 않아” vs “경기 활력”
춘천 앞두고 정치권 민감 반응

고, 건폐율과 인동간격 등에 대한 규제 완화도 구체화했다.

■전문가들, 탁상공론 비판

강원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이라 지적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법을 검토 중인데 도심지 안에 100만㎡ 부지를 개발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수도권은 일부 대상지가 보이지만 춘천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관계자는 “춘천시 삼천동 아이파크가 10

만㎡ 수준이라고 보면 정부발표는 현실성이 없다”며 “춘천은 이미 소양동, 약사명동 등 필요한 지역의 개발은 이미 했거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춘천, 원주, 강릉 등 해당 지역에 속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 밝혔다. 최경순 원주시 지회장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능하더라도 최소 5년 이상은 걸릴 정책이다”고 말했다. 김영숙 강릉시 지회장은 “바로 시행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이며 다른 법도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춘천 직전, 추가 반영 주목

춘천을 70여일 앞두고 대규모 규제완

화를 골자로 한 노후도시정비법에 춘천 퇴계, 후평, 석사동과 원주 단계동이 반영,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지역 중 퇴계·후평·석사동은 춘천갑선거구, 단계동은 원주갑선거구다. 이들 지역 상당수는 춘천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곳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발표하다 보니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는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환영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와같은 결정에

집체된 강원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동준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사무처장은 “강원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며 “각 지역이 재개발을 진행한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기에 차후 진행과정을 봐야겠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춘수 춘천 소양축전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은 “소양축전2구역 재건축 5만㎡의 소유주에 대해 동의 받는 것도 몇 년이 걸렸다”며 “설득과 동의 절차 등을 감안하면 재개발 자체가 쉽지 않다”고 현실적인 이윤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세현·정우진

2024 02 02 ()

06

江原日報

강원대 의대 지역인재 2배 늘린다

2025학년도 강원대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가 현재 15명에서 30명 전후로 늘어날 전망이다. 더욱이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게 되면 지역내 선발 인원은 60명으로 증가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신경호)과 강원대(총장·김현영)는 1일 강원대 대학본부에서 ‘지역 우수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역량 있는 지역인재를 양성해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르면 강원대 의과대학은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기존 31%에서 60%로 확대한다.

교육부가 정한 강원대 의대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은 20%이며 강원대는 이보다 많은 31%의 지역인재를 뽑고 있다. 2024학년도에 강원대 의대는 신입생 49명 중 15명의 지역인재를 선발했지만 협약에 따라 빠르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이 인원이 30명가량으로 늘어날다. 이후 다음 학년도부터 단계적으

로 지역인재 비율을 8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일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강하게 밝힘에 따라 강원대 의대 정원도 현재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강원대 의대가 정부에 수용 가능 인원으로 제시한 100명으로 정원이 확대되면 이 중 60%

로 지역인재 비율을 8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로 지역인재 비율을 8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에 해당하는 60명의 지역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등 지역 내 의과 보유 대학과 협의해 지역인재 선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현영 총장은 “이번 협약이 교육

발전특구, 강원교육 혁신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범대, 공대, 농대 등 다른 단과대의 지역인재 선발 규모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지역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지역의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소통하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희기자 yulnyo@kwnews.co.kr

2024 02 02 ()

江原日報

19

설 명절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 광광

속초수산물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고성사랑상품권 구매 한도·할인율·캐시백 적립 상향

【속초·고성】설 명절을 맞아 속초·고성에서 지역상품권 할인 확대·상품 구입 시 환급 등 소비 촉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양각색 이벤트가 펼쳐진다.

속초시는 2~8일 속초관광수산물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벌인다. 앞선 2021년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처음 실시해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올해도 추진된다.

속초관광수산물시장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129개 점포에서 구입한 국내산 수산물의 당일 영수증을 시장 2층에 위치한 환급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3만4,000원 이상 6만8,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8,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원을 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고성군도 풍성한 혜택을 예고했다.

군은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간 설맞이 고성사랑상품권 특별할인 이벤트를 실시, 1인당 할인 구매 한도를 현행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하고, 할인율도 기존 5%에서 12%까지 상향한다. 또 기존 한 달간 최대 2만5,000원의 캐시백을 적립할 수 있었다면 이번 이벤트를 통해 최대 8만4,000원을 적립할 수 있게 된다.

함명준 군수는 “군민들이 설맞이 고성사랑상품권 특별할인 이벤트로 다가오는 설 명절을 더욱 풍성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원근·김천열기자

2024 02 02 ()

江原日報

20

‘삼척역 KTX 도입’ 필요성 입증 주력

시, 타당성 용역 착수

【삼척】삼척시가 서울~동해역까지 운행되고 있는 KTX를 삼척역까지 연장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올해 말로 예정된 포항~삼척 간 동해중부선 철도 개통과 연계해 KTX 구간을 삼척까지 연장하는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 9월까지 진행된다. 이에 앞서 최근 삼척역 KTX 도입을 위한

현재 서울~동해 구간 운행 ... 삼척까지 연장에 사활
동해선 전철화 완료 시 기반 갖춰 ... 정부 설득 계획

타당성 검토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용역사와 향후 용역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시는 용역을 통해 동해선 전철화(포항~삼척~동해) 완공에 맞춰 삼척역 KTX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연장운행의 필요성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동해선 전철화가 완공될 경우 삼척까지의 KTX 연장 기반시설이 갖춰지게 돼 비전철로 인해 사각지대로 치부됐던 삼척~동해 구간 역시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특히 삼척~포항 간 동해중부선 철도가 개통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

2030년)에도 삼척~강릉 간 고속화 철도가 반영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점, 국가 차원의 신규 철도 구축이 확정 또는 완공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KTX 삼척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고속철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철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중앙부처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황민진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2 02 ()

16

영월 상동읍 텅스텐 광산 재개발 '속도'

알몬티대한중석 512억원 투입

영월 상동읍에서 텅스텐 광산 재개발을 추진중인 알몬티대한중석이 올해부터 512억원을 순차적으로 추가 투입해 본격적인 광산 개발에 나선다.

루이스 블랙 대표는 지난 31일 영월관광센터에서 안태섭 이장연합회장과 엄연옥 여성단체협의회장, 엄순영 원로회장 등 영월지역 각급 사회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텅스텐 광산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루이스 블랙 대표는 "현재까지 1200억원 이상의 건설

자금을 투입해 4차산업의 핵심 광물인 텅스텐 광물 개발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부지 확보와 각종 인프라 시설 설치, 플랜트 공장 건설을 위한 주요 기자재 배치 등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빠른 시일내에 공장 착공과 시운전으로 안정적인 첫 생산을 시작해 영월과 상동지역의 고용 창출과 지역 활성화 등 연쇄적인 경제 파급 효과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핵심 광물인 텅스텐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영월은 물론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전반에 결정적인 기여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안태섭 회장은 "대규모 지역투자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사회 환원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방기준 kjbang@kado.net

2024 02 02 ()

22

江原日報

'백마고지~연천역' 전철화 추진

디젤열차 탄소배출 감축 이유 2028년까지만 운행

철원군 경제성 분석... 5차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구상

【철원】철원군이 연천역~철원백마고지역 20.6km 구간에 대한 전철화를 추진한다.

연천~백마고지 구간은 2019년 4월 동두천~연천 구간 전철화 공사가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철원군과 지역 정치권은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연천~백마고지 구간의 열차 재개

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올해 말 해당 구간 열차 운행 재개를 약속받았다.

다만 군은 해당 구간을 오가는 디젤열차가 탄소 배출 감축 등으로 2028년까지만 운행이 가능해 연천~백마고지 구간 20.6km 구간을 전철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

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및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천~철원 전철화 사전기획 및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해당 구간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해당 구간의 경제성 분석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용역보고서에 담아 내년 3월 국토부가 실시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킨다는 구상이다. 특히 군은 기존 철도 노선이

존재하고 선형 개량 등 전철화를 위한 보완이 이뤄지면 전철화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익수 군 건설도시과장은 "올해 말부터 연천과 철원을 오갈 디젤열차가 2028년 이후 퇴장할 예정인 만큼 미리 해당 구간의 전철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전철화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강원자치도·지역 정치권과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호기자 mantough@

강원도민일보

2024 02 02 ()

11

춘천시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도전장

수요조사 후 내달 공모 신청
선정시 내년부터 2년간 추진
시설 현대화·청년 유입 기대

춘천시가 후평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지역 내 노후 산업단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한다.

1일 춘천시는 후평일반산업단지 및 연계 산업단지 등 대부분 50년이 넘는 지역 내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해 노후거점산

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에 나선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다. 해당법에 따라 정부는 착공 후 20년이 지난 산업단지의 부가 가치를 높이고 기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춘천 후평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지어진 지 52년이 넘었고 퇴계농공단지 역시 30년이 경과돼 산업단지 기반이 노후됐고 일자리 미스매치 등의 문제점이 지속된 상황이다.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춘천시는

지난해 7월 강원연구원에 사업계획 수립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설명회도 개최했다. 이후 올해 1월부터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와 사업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요조사는 이번 달 내로 마칠 계획이다.

수요조사를 통해 해당 산단 소재 기업이 원하는 시설이나 사업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춘천시는 오는 3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는 사업 공모에 참여할 예

정이다. 이후 평가를 거쳐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오는 12월 예산이 반영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2년에 걸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이 추진된다.

최인숙 춘천시 투자유치과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춘천시내에 있는 노후산단에 휴식공간이 만들어지거나 생산 공정을 현대화해 청년들을 산단의 일자리로 유입할 수 있는 효과까지 기대된다”며 “산단 내 기업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강원도민일보

2024 02 02 ()

14

주말 태백 스포츠 행사·겨울축제로 ‘들썩’

내일부터 전국 3대 3 농구대회
태백산눈축제 50만명 돌파 눈앞
경제 활성화 시너지 효과 기대

이번 주말 태백 경제를 살찌우는 스포츠 행사와 겨울축제가 줄지어 판을 벌인다.

한국 3대 3 농구연맹이 주최·주관하고 태백시, 태백시의회, 강원도민일보가 후원하는 ‘2024 ALWAYS 태백 전국 3대 3 농구대회’가 2일 오리엔테

이션을 시작으로 3~4일 고원체육관에서 펼쳐진다. 시구행사는 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일명 ‘길거리 농구’로 불리는 ‘3대 3 농구대회’는 태백 최초로 열리는 대회로, 하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선정돼 젊은 층 사이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과 인천, 대구, 부산, 울산, 대전, 광주,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농구를 좋아하는 20~30대 남녀 아마추어 동호인 80여팀 400명이 참가한다. 선수들은 총 80여 경기를 치르고 태백산눈축제에 참가해 스포츠

와 휴가를 즐긴다.

이상호 시장이 참여하는 ‘태백장사 팔씨름대회 시장님을 이겨라’를 비롯해 ‘3대 3 컬링 챌린지 이벤트’, ‘3대 3 다트 챌린지 이벤트’, ‘3대 3 농구 3점슛 챌린지 이벤트’, ‘순간포착 이벤트’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펼쳐진다.

태백교육지원청 소속 학생들의 대회 운영위원 참여로 스포츠 마케팅, 이벤트 경영, 미디어 등 진로 탐색의 장으로도 활용된다.

지난 26일 개막해 30만명이 넘는 관람객을 유치, 성공축제로 평가받

고 있는 국내 대표 겨울축제인 태백산눈축제는 마지막 주말을 맞는다. 눈조각, 얼음철매장, 눈미끄럼틀, 전통야외 겨울놀이 등 행사장은 시민·관광객들로 연일 북적이고 있다. 관람객 50만명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3대 3 농구대회는 스포츠 메카로의 위상 강화뿐만 아니라 휴가와 교육,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태백산눈축제가 함께 열리면서 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우열

江原日報

2024 02 02 ()

19

인제군 '캠핑'·'물' 만난 여름축제 기획

군문화재단 스노우피크 협약
지역 관광·축제 활성화 맞손

【인제】인제군문화재단과 글로벌 아웃도어 캠핑브랜드 스노우피크 코리아가 지역 관광·축제 활성화를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재단과 스노우피크 코리아는 1일 인제군청 소회의실에서 인제군 관광 및 축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 상생을 위

한 체류형 관광·축제 상품개발 및 지역 특산품 활용, 선도적 캠핑문화 전개, 캠핑상품 개발을 위한 인제군 지역 내 캠프 이벤트 개최, 인제군 캠핑장 컨설팅 등이다

재단은 협약을 통해 '인제빙어축제'의 명성을 이을 또 하나의 명품축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매년 20만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인제빙어축제가 올해 소양강댐 수위가 높아 취소된 가운데 재단은 대안축제로 '캠핑'과 '물'을 주제

로 여름축제를 기획하고 있다.

군은 축제가 열리는 인제군 남면 빙어호 일원에 2027년까지 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사계절 복합관광지를 조성 중이며, 올해 명품생태화원이 준공될 예정이다.

전만호 인제군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인제군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객은 물론 생활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江原日報

2024 02 02 ()

19

러시아산 인제 황태 美 수출길 막혔다

【인제】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거진 미국의 러시아 경제 봉쇄가 인제지역 황태 수출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원산지가 대부분 러시아산인 인제의 명태 관련 상품 대다수가 미국의 수입 금지품목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1일 인제지역 황태 및 관련 제품 수출업자들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

러-우크라 전쟁여파 통관 불가능... 지역업체 생계 위협
알래스카산 대체 시 원가 부담... 군 "적극 대응할 것"

라 미국은 러시아 경제제재 일환으로 본토로의 러시아산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업체는 이날 미국 현지 바이어들로부터 원산지가 러시아인 인제 용대리 명태 제품을 통관이 불가능하다는 통보

를 받았다. 문제는 황태 관련 업체가 인제지역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타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인제군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에서 황태를 사용한 제품을 수출하는 9개 업체의 수출액은 4억2,

000만원이다. 이는 지역 전체 수출액의 약 40%에 달한다. 더욱이 러시아산을 미국 알래스카산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원가비용이 10% 늘어나는 만큼 부담이 큰 상황이다.

용대리 황태 관련 법인을 운영 중인 최중국 대표는 "정부 부처 등으로부터 미국 수출이 금지됐다는 내용의 관련 문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 현지에서

는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답답할 뿐"이라며 "행정에서 대책이 나오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아직 정부나 도로부터 해당 문서도 없어 애로 사항이 많다"며 "군 수출협회와 대책을 논의하는 등 수출업체들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 02 02 ()

/ 19

강원 산업 전망 어둡지만은 않다

-제조업 부가가치 성장... 첨단분야육성 기대

산업 기반 약화와 젊은 층 이탈 등 악재로 강원도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를 비롯해 군 단위 인구는 매년 줄어, 공동화를 우려하는 지경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신산업 발굴과 교통망 확충을 통해 지역을 회생시키는 일이 지상 과제입니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 시행으로 각종 규제를 걷어내 지역을 부흥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면에서는 기회로 인식됩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이 시기에, 강원 제조업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자료가 발표돼 관심을 끄니다.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강원 미래 산업의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조사 결과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강원지역 제조업 생산성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제조업 생산성은 2016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로 다른 지역보다 저조한 편입니다. 다만 도내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2011년 3조 7000억원에서 10년 만인 2021년 6조 4000억원으로 연평균 5.6% 성장했고, 전국 연평균 2.9%를 상회했습니다. 강원지역 제조업 기술 수준이 고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업종별 성장 추입니다. 2011~2021년의 의료기기는 연

평균 2.8% 성장했고, 전기장비와 식료품, 의약품 등에서 생산성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해당 업종들의 수출 증가율을 보면 면류 83.6%, 전선 67.5%, 의약품 32.2% 등 생산성과 수출이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양의 상관관계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출을 하고,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성이 향상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비금속 광물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이어 두 번째, 의료기기는 충남,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생산성을 보유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판단하자면, 전기와 의약·식료품 등 미래 산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생산과 수출의 상관관계를 살펴, 무역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방법만으로 산업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생산성 향상의 주체인 기업은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등 정책 당국은 특별자치법 특례 등을 활용해 미래 첨단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산·학·연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2 02 ()

/ 19

도 감사위 부패 감시 책무 크다

-각종 부당행위 적발, 결과 상세 공개해야 예방효과 커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 논란 중심에 섰던 여러 사안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올 1월 도교육청의 전자철판 보급사업 추진과 통일교육단체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강원연구원에 대해 감사를 벌였으며, 원주시의 직원 다면평가 폐지 및 직후의 인사권 행사 논란에 대해서도 도감사위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작년 말 발표한 청렴도 수준이 강원은 대개 하위권에 머물기에 도감사위 활동에 더 관심이 쏠리는 것입니다.

도감사위는 작년 6월 출범 후 진행된 감사 내용을 간략하지만 공개해 왔습니다. 재정 투명성분야에서는 지자체가 통합발주사업에 대해 분리 발주하거나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고 1인 수의계약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례를 밝혀냈습니다.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서 전결처리해 지출하거나 계약으로 집행해야 할 시설공사비를 사무관리비로 쓴 사례도 발각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보고서도 감사를 실시해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식비와 회의비 등을 쓴 경우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기까지 했습니다.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한 지

출은 더 엄정하게 다뤄야 합니다. 작년 감사원 감사 결과 도내 지자체에서 현장 감독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피복비를 업무와는 무관한 중간 간부의 고급 스포츠의류를 사는데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교육 실적이 중복 입력돼 실적이 충족되지 않은 5명이 부적정하게 승진되고,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됐는데도 장관 표창을 받은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공직 내부의 상사 갑질은 뿌리뽑아야 합니다. 직장 갑질과 성 비위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 표면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장과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견제할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가 '신속하고 공정한 독립적 감사'입니다. 부당한 인사권을 견제하고, 재정 낭비를 막는 최일선에 감사의 기능과 역할이 있음을 매 순간 상기해야 합니다. 고도의 자치권이 주어진 특별자치도로 출범함으로써 지자체 권한이 확대된 만큼 각종 행정 행위에 권한 남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청렴도 수준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해당 기관만이 아닌 도민에게 더 상세하게 공개해야 예방 효과를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江原日報

2024 02 02 ()

/ 25

노후 인프라 개선 재투자는 ‘보편적 복지’다

도내 사회기반시설(SOC) 4개 중 1개는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인프라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시설물 중 교량, 터널, 수도, 댐 등 주요 시설물 4,464개 중 B등급 이상으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곳은 3,465개(77.6%)였다. 보통을 의미하는 C등급은 932개(20.9%), 미흡 수준인 D등급은 65개(0.1%), E등급(불량) 2개로 조사됐다. 도내 점검 대상 시설물 1만372개로 범위를 넓혀보면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시설물은 5,880개에 달했다. 이는 56.7%에 해당하는 규모다.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만 분류해 보더라도 2,862개로, 전체의 27.6% 수준이었다. 30년 이상 지난 시설물 중에는 철도가 1,376개(48%)로 최다였다. 이어 도로 1,004개(35%), 저수지 286개(10%) 순으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도내 SOC는 1970년대 들어서면서 집중적으로 건설됐기 때문에 약 50년이 지나면서 빠르게 낙후되고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인프라 시설 유지·보수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낡고 오래된 SOC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안전사고다. 2018년 일어난 용산상가 붕괴사고 등도 노후화에서

비롯됐다. 안전은 도민들의 생존이 걸려 있다. 당장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10년간 인프라에 1조달러를 투자하며, 일본은 10년간 약 2,000조원의 국토 강인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들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는 이유는 국민 안전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 인프라 재편을 위해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국회는 ‘치적’으로 내세우기 쉬운 SOC ‘신규 건설’에만 관심을 가질 뿐 ‘유지·보수’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게 사실이다.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올린 보수 사업도 예산 조정 과정에서 삭제하고 효율성이 불확실한 신규 사업으로 대체되기 일쑤였다. 이러다 보니 SOC의 유지·보수는 늘 뒷전이였다. 이제는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투자는 우리 모두의 안전한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 복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도시와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도내 SOC에 대한 고도화 투자는 엄청난 생산성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江原日報

2024 02 02 ()

/ 25

재건축·재개발, 도시계획 큰 틀에서 시행돼야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건설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희부지를 포함해 면적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이에 따라 도내 5곳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돼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원주 구곡(141만㎡·8,895가구·공동주택 기준), 단관(100만㎡·6,145가구), 강릉 교

동 2지구(114만㎡·7,428가구) 등 3곳 이외에 원주 단계(5,424가구), 춘천 퇴계·후평·석사 일대(3만5,063가구) 등이 추가됐다. 모

두 6만2,955가구에 이른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크게는 지역 전체가 발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도내 각 지역이 전국의 도시들과 대등한 위치로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때문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의 취지나 동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더욱이 추가

된 지역은 단일 지역으로는 100만㎡가 되지 않지만, 인접지역과 합산하는 경우 가능해지는 곳이다. 그동안 정부는 조성 이후 20년이 지난 면적 100만㎡ 이상의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곳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밝혀 왔다. 그러나 시행령으로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사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택지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구도심·유희부지까지 면적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는 지

역 개발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

춘천·원주·강릉 등 6만여가구 대상

일부 지역 문제 벗어나 통합 차원에서 접근을

주민과 소통 지역 특성 살려 나가야 ‘시너지’

치단체,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의 큰 틀 아래서 방향이 잡혀야 한다. 그래야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일부 지역의 문제로 국한해 볼 것이 아니라 통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주민과 지역 특성을 존중하며 환경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하며 난개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낙후지역을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하루아침에 뜯어고치겠다는 자체도 무리다. 의욕이 앞선 사업은 오히려 주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비전을 갖고 차분히 시작해야 한다. 또 이 사업이 자치단체의 개발 계획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는지도 살펴야 한다.